

정치개혁법 여성계 거센 반발

정치참여 활성화 '공천 할당제' 빠져...의회진출 좁은길 여전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3개 정치개혁법에 대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지난 4일 확정된 정치개혁법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여성 공천 할당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여성계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정치개혁법이 돈 안쓰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성계가 줄곧 요구해온 여성 공천 할당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도외시한 것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도 채 안되는 현실을 개선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은 전체 인구의 50%, 유권자의 57%,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대표성은 1%도 안되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저조한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정치개혁법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개혁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해말 정치개혁법 시안을 발표중인 여성단체 대표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저조한 정치적 대표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정치개혁법 타결 직후 마련된 <문화방송> 텔레비전 시사토론 대담에서 "통합선거법에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민자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

지기도 했다.

이 대담에서 민자당의 박희태 의원은 "여성 유권자가 50%를 넘는데 할당하려면 50% 이상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비례대표 할당은 당헌이나 당규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므로 민주당이 원한다면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식의 냉소적 견해를 밝혀 여성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 대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

연합(공동대표 한명숙 등)은 9일 성명을 내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제가 무산된 데 대해 민자당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민자당이 여성 비례대표 할당을 당규에 넣겠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정치개혁법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정치개혁법에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이 무산된 직후

당헌·당규에 여성 할당제를 명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 공동대표는 "정치개혁법은 남성 의원이 전체 의석의 99%를 차지하는 정치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 1%가 말해주는 정치현실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으로는 여성 할당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93년말 현재 세계 각 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평균 비율이 11%인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다 해도 평균치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이 공동대표는 내다보았다.

이우정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여성의 의회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여성 의원 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미 70년대부터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여성의 의회진출률이 30%를 웃도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여성 할당제 도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